

발전국가 한국의 사회정치와 스포츠

박해남(한신대·성신여대 강사)

1. 문제제기

‘3S(Sport, Screen, Sex)’라는 개념은 1980년대의 사회와 문화를 말할 때 자주 활용되는 개념 중 하나다(Davis 2011, 106). 이는 『국풍81』, 컬러TV의 등장, 성인 영화 흥행, 1982년의 프로야구와 1983년의 프로축구·프로씨름의 출범 등으로 이어진 1980년대 전반기의 대중문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1980년대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주 활용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통해서 논자들은 전두환 정부의 대중문화 정책이 국민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대중문화 쪽으로 돌려 대중을 ‘우민화’하고 또 ‘탈정치화’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설명했다(강지웅 2006, 72-74).¹ 1980년대 후반기를 대표하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인 88 서울올림픽과 86 아시안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되었다. 다음 인용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소위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86·88’은 현정권이 통치명분으로 내세운 알파요 오메가였다. 이 야릇한 관제 조어는 관제 마스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선전되면서 대중 세뇌의 핵으로 등장하여 대중을 그야말로 입만 병긋하면 86·88을 읊조리는 백치와 같은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말』, 1986년 9월 30일, 21).”

이와 같은 ‘3S’, ‘우민화’, ‘탈정치화’ 같은 개념들은 1980년대 스포츠 정책을 설명하는 강력한 개념어가 되어 있다. 일례로 1980년대에 관한 대표적인 대중적 역사서들을 보면 이러한 틀에 기초하여 당시의 스포츠 정책과 대중문화 정책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준만 2003, 112; 정해구 2011, 228).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경우 출범이 정부 지시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민간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점(정준영·최민규, 2016), 당시 대중들이 여가활동에 대하여 큰 관심 등 가졌다는 점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정준영 2012, 47). 더욱이, 의도에 대한 해석 역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1981년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으로 프로야구 창립을 주도했던 이상주는 2000년대 초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은 결코 탈정치화나 우민화를 위해 프로야구를 만들지 않았음을 피력한 바 있다.²

이 글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 올림픽과 1980년대 한국의 사회정치]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출판을 계획하고 있으니, 출판된 논문을 인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¹ 이 개념은 일찍이 20세기 중반 일본에서 활용된 바 있다. 3s는 1930년대 중반 speed, sports, screen을 약칭하는 개념으로 쓰이다가, 일본 미군정 시기에 이르러 sports, screen, sex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Abel 2012, 284).

² 2005년 5월 22일 MBC를 통해 방영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스포츠로 지배하라! 5공의 3S정책”편이었다. 그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인 입장이

이와 같이 해석되어 왔던 개발독재 시기 스포츠에 대하여, 이 글은 다소 다른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해당 시기 국가의 성격 중에서 권위주의적 측면, 즉 사회 구성원을 탈정치화시킬 필요성을 지닌 체제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경제의 성장을 최우선시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발전국가’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여 사회문제에 대처하려 했던 정치(사회정치) 수단의 하나로 발전국가의 스포츠 정책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이르는 시기를 둘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사회문제는 어떻게 정의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치는 어떤 측면을 강조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 변화에 기초하여 스포츠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정치에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우선 이 글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정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 후 3장에서 발전국가가 시작되고 본 궤도에 오른 1960-70년대 당시 국가는 사회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또한 여가 정책과 스포츠 정책은 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여가에 대한 국가의 접근과 어떻게 1980년대 스포츠를 통한 여가 공급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전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에 개입하여 이를 개조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여가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 그러한 습속 개조의 수단 중 하나였으며, 여가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방식은 1960-70년대의 통제와 제한에서 1980년대의 공급으로 그 방법이 변해갔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2. 사회정치에 대하여

사회정치(social politics)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정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Hayes 1913).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등장한 범죄와 질병 등의 병리적 현상들, 시장과 임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빈곤층의 발생, 농촌의 사회적 후진성 등 사회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Flanagan 2007, 119; Rodgers 1998, 3). 사회정치를 통해 국가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서구 사회들의 자본주의 이행과 산업화 과정은 다수의 노동자 및 민중계급이 대중적 빈곤(pauperism)이라 불리는 집단적 빈곤 상태에 빠지게 했고, 이들의 생활공간인 도시는 질병과 범죄 등으로 대표되는 병리 현상으로 얼룩지게 했다. 사회문제(영: social question, 프: question sociale, 독: soziale Frage)는 이러한 사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1830년대 프랑스와 1840년대 독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다나카 2014, 75; Kaufmann 2003, 14; 24). 앞서도 보았듯이, 사회문제는 민중계급의 빈곤, 생활에서 발견되는 범죄와 질병의 만연, 습속의 급격한 변화와 분화, 계급간 갈등 등의 현상을 포괄한다(나인호 2000, 669).

19세기 말 영국에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 행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들이 있었다(Rae 1890, 436; Hayes 1913, 3). 이들은 전통적으로 이뤄져 온 교회 중심의 자선 또는 구빈과 대중적 빈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구별하였고, 후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정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³ 대표적으로 영국의 거대 산업도시 버밍엄의 시장으로

바뀐 상태였다. 그 같은 인터뷰를 단순히 변명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

³ Williams(1950, 411)에 따르면 기독교회의 구빈과 사회정치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전자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하는 반면 후자의 동기는 정의(justice)에 입각한다. 둘째, 전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을 고려 대상에 넣지만 후자는 인구 전체를 고려하고, 대중적 빈곤이라는 현상 자체를 없애려 한다. 셋째, 전자는 치유적 성격을 가져 이미 빈곤에 빠진 자를 도와주지만, 후자는 예방적 방법을 선호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지방행정기구의 광범위한 개입을 이끌었으며, 나아가 이를 국가스케일로 확대하려 했던 조셉 챔벌레인(Joseph Chamberlain)이 이 사회정치 개념을 활용한 이였다(Greenleaf 1983, 225-6).

사회정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나왔지만, 사회문제에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이를 둘러싼 정치행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 산업국가 어디를 보아도 존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880년대 중후반 독일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제도화되면서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이 뿌리를 내렸다(Kaufmann 2003, 7-8). 프랑스의 경우 보편적 사회입법은 늦었지만, 20세기 초입에 주택,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관들이 민간 영역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다(Elwitt 1986; Horne 2002). 미국의 경우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는 민간의 지식인과 활동가 집단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했다(中野 2015). 이 같은 국제적 컨센서스의 형성은 2차대전 이후 서구에서 ‘복지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20세기 들어 사회권이 기본권이 되었다는 마셜(T. H. Marshall)의 주장은 이와 같은 초국가적인 발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Marshall 1950, 46). 그런 점에서 이 개념은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1960-70년대의 발전국가와 스포츠

1) 빈곤문제와 습속개조의 사회정치

한국의 자본주의화,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문제는 식민, 해방, 분단 등 다양한 사건들과 더불어 등장했다. 그렇기에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수반하는 문제들이 매우 극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이 그러했다.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구이동 과정에서 상당 수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1945년 90만명 정도였던 서울 인구는 10년 뒤 157만 5천명으로 급속히 증가한 상태였다. 여기에 1950년대 이후 지속된 농촌의 빈곤과 60년대 초반부터의 경제성장 과정은 서울의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 1960년 244만명이던 서울 인구는 10년 뒤 550만에 가까운 정도로 증가했고, 20년 뒤인 1980년에는 836만 5천명 수준이 되어 버렸다(서울특별시 2010, 4). 국내 2차 산업 고용의 약 45%와 서비스업 고용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력시장이었기에 서울의 인구는 그토록 빠르게 팽창했던 것이다.

이런 도시인구의 증가 가운데 도시문제 역시 매우 현저하게 드러났다. 해방 이후 서울로 향하는 이들 중 서울에 특별한 터전이 없는 이들은 2차대전 당시 만들어진 소개공지, 하천변, 산기슭 등 주로 유희 국공유지에 무허가 정착촌을 형성했다. 1966년 당시 조사 결과 127만명 정도가 총 13만 6천동의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한상진 1992, 68). 당시 서울 인구가 380만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서울 인구의 1/3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집 마저도 없이 떠도는 이들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1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한 부랑인 수용시설인 시립 갱생원이 ‘세계 최대 규모’라 일컬어지는 것을 보면 말이다(김수현 2010년 8월 27일).

이러한 사회문제와 도시문제를 조우한 국가는 어떻게 이에 대처했는가? 일단 지적할 점은 당시 서구 국가들과는 매우 달랐다는 점이다. 2차대전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기구들은 1940년대 내내 반복적으로 ‘사회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천명하였다. 1941년 대서양 헌장은 ‘사회적 안전의 보장’을, 1944년 세계노동기구(ILO)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선언은 모든 인간의 “자신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보장을

대중들의 빈곤상태의 지속과 성장을 막고자 한다.

받을 권리'를 포함한 제반의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승인하였다(Kaufmann 2015, 52). 나아가 UN은 1950년대 후반부터 사회개발 아젠다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제3세계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백승욱·이지원 2015, 355).

이와 달리, 1960~70년대 한국에서의 사회정치는 기본권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편이었다. 시민 사회의 대변자 혹은 중재자로 존재하면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일반과 다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발전국가라는 한국 국가의 특성은 사회정치를 조건지우는 것이었다.

1960-70년대 한국의 정권엘리트와 관료기구 등 국가 부문을 구성하는 집단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지향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발전주의였다(Woo-Cumings 1999, 1).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국가의 지위 상승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에 대한 욕망과 강력히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19세기 말 서구와의 조우 속에서 생존의 위기 감각과 더불어 만들어진 것이었고(김홍중 2016, 286-7), 이는 빠른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 내에서 지위를 재구성하려는 야망으로 이어졌다(Black and Peacock 2004, 2272-3).⁴ 이러한 민족주의는 1960년대부터 서구에 대한 학습에 기초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방법론과 결합했다(Amsden 1989, 5).

발전국가는 시민사회 및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징을 지닌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강력하고도 유능하며 집합적 응집력을 가진 관료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는 시장 및 시민사회와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자율성을 지니는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지니고 있다 평가된다. 시장 및 사회와의 관계가 멀지 않되, 그들을 대표(representation)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발전국가는 경제발전을 위주로 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은 국가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실천하며(윤상우 2005, 46-49; 김윤태 2012, 11), 사회는 동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조희연 2003, 59).⁵

특히 발전국가가 강조했던 사회문제의 해결 방식은 습속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빈곤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개별 주체들의 습속에 있다고 보고 이를 바꿈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 길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1기 발전국가를 구성한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와 더불어 대중의 습속에 개입하여 이를 바꿔내려는 시도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정희가 이끄는 군정은 혁명공약 총 6개 조항 중 제 3조에서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을 공약했다. 당시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에 문제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조할 것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⁶

⁴ 이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19세기에 형성된 일본 내셔널리즘은 일본을 서구 문명세계의 구성원으로 만 들고자 하는 욕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모리 2002, 32-35).

⁵ 보날(Louis Bonaled)과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생시몽(Henri de Saint-Simon)부터 콩트(August Comte), 르플레(Frédéric le Play), 케틀레(Adolphe Quételet), 뒤르켐(Emile Durkheim)에 이르는 사회사상가들과 사회학자들의 공통점은 습속(moral)이 사회를 이루는 핵심적 요소라고 본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습속의 개조는 사회의 개조로, 습속의 동원은 사회의 동원으로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다 판단된다. 여기에는 사회 내부의 대립 혹은 모순에 의해 사회문제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사회 그 자체가 본래 문제적인 것으로 보는 일본 사회과학의 '사회' 관념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시다 2003, 75). '명랑'이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여서, 20세기 초반 일본에서 미(美)·건강·위생 등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도시 및 사회와 쌍을 이루어 활용되었다(友常, 미상).

⁶ 서구에서도 2차대전 이전에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두고 정치세력 간의 경합이 존재했었다. 그 중에서도 습속개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이들의 비중은 적지 않았다. 주로 중산층 사회개혁가들인 이들은 노동계급 대중의 습속을 바뀌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 이들은 산업화와 도시화 가운데 형성된 습속의 급변이 노동계급을 포함한 민중 사이에 만연한 질병과 범죄라는 병리적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고, 이것이 빈곤을 유발하는 리스크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층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여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노동계급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문제들에 대비(prévoyance)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Elwitt 1986, 217-259).

발전국가의 엘리트들은 당시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당대 사회가 조우하고 있는 경제적 빈곤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에 귀인시키면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습속을 집합화시켰다. 박정희의 경우, 경제력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눈 1950년대 후반 발전주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한국 사회가 빈곤하고 후진적이라고 판단했다(김종태 2015, 115-122). 그리고 “후진 민족들은 ‘게으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았고(박정희 1962(2005), 63). 구체적으로, “되도록 일하지 않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불로소득의 양반 경제 관념이 무사 안일주의를 길러 내어 게으른 민족성을 이룩했다”고 설명하면서(박정희 1962(2005) 101), 사회구성원 전반의 습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그가 보기에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에 내포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사대주의와 자주정신의 결여, 게으름과 불로소득관념, 개척정신의 결여, 기업심의 부족, 악성적 이기주의, 명예관념의 결여, 건전한 비판정신의 결여 등 다양했다(박정희 1962(2005), 62-73). 이렇게 문제 많은 습속을 ‘깨끗이 청산하고 건전한 국민도(國民道)를 확립’하여 ‘사회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의 야심이었다(최연식 2007, 47).

실제로 군인들은 매우 빠르게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이들은 쿠데타 일주일 뒤인 1961년 5월 24일부터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구로 ‘재건국민운동’ 조직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약 보름 뒤인 6월 12일에는 법률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제 622호)”을 공포했고, 260만명의 회원을 가입시킨 조직을 7월 20일에 출범시켰다(전재호 2010, 53). “국민혁명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조 운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이 운동에 대하여 군인들은 몇 달도 되지 않아 “사회의 생활혁명”을 일으켜 “한국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있음을 자부했다(민주한국 혁명정사편찬위원회 1962, 110).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가가 제시한 것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습속이었다. 재건국민운동부터 새마을운동에 이르기까지 정권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동원이 가능한 생산성, 근면성, 이윤개념을 습속화 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문했다.

재건국민운동이라는 관제캠페인이 목표로 한 것은 1. 승공민주 이념, 2. 내핍생활, 3. 근면정신 고무, 4. 생산 및 건설의식 증진, 5. 국민도의 양양, 6. 정서관념 순화, 7. 국민체위 향상이라는 7개였다(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1704). 내핍생활, 근면정신, 생산 및 건설의식 등을 강조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의지와 습속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은 습속의 하부구조로 설정된 의식의 변화이자 습속의 변화였다.

비슷한 어조가 1960년대 후반부터의 사회개발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1960년대 UN에서 사회개발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백승욱·이지원 2015, 353-355). 그 결과 1968년 『사회개발 기본구상』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던 UN의 주장과 달리 한국에서의 ‘사회개발’ 논의는 (정부가 강권하는) 새로운 의식과 행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신개조’와 ‘사회 규율확립’에 관한 논의가 되었다(허은 2010, 218-222). 이듬해 나온 『사회개발 장기전망』 역시 ‘경제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정신자세의 확보를 중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허은 2010, 225), 1974년 발간된 『사회개발 - 부분별전망안』 역시 사회개발의 역할을 ‘국민총화’에 두고 ‘사회기풍의 순화를 통한 정신기반의 확립’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허은 2010, 232-234). 그리고 국가가 정신개발 추진 기구를 만들어 민간사회단체들을 교화하고 국민들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그 실천 방안이었다(백승욱·이지원 2015, 375)

1970년대를 대표하는 관제캠페인이었던 새마을운동을 통해서도 국가는 개인들이 가져야 할 습속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는 농촌이 빈곤한 문제의 원인이 농민들의 습속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종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이뤄지도록 하면서도 담론적으로는 ‘자력갱생’ 및 ‘자조(self-help)’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 차원에서 습속을 개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이용기 2012, 76-78). 이런 발전국가가 상정한 의식 개조란 ‘잘사는 것’ 혹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의지로 정의될 수 있다(내무부 1980, 64-69). 발전국가는 의식 개조를 통해 근대화와 풍요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습속을 가질 것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했고(허은 2010, 220), 생산성, 근면성, 이윤개념 등을 습속화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일례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수기를 보면 농민들을 근대적 시간 및 이윤 개념을 내면화한 자본주의적 개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음이 드러난다(최인이 2011, 123-134).

2) 사회정치 담론장으로서의 스포츠 활용과 여가의 통제

박정희 정권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관제캠페인인 재건국민운동은 7대 목표 중 하나로 ‘국민체위 향상’을 제시했다. 그만큼 신체능력의 향상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이듬해인 1962년도에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고, 국민체육진흥법도 제정한다(정영환·이호근·신현규 2009, 69-70). 체육의 날 설정, 지방 체육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 직장 운동부 설치, 선수 보호 및 육성, 체육용구 생산 장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이학래·김종희 1999, 30-31), 엘리트체육만 아니라 전국민의 생활체육에 기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다.⁷

⁷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발전은 경제의 발전과 매우 닮아있다. 서구 세계가 상정한 경제발전은 기업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 기업가들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 믿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국가인 박정희 정부는 이와 달랐다. 국가가 경제성장 목표를 비롯한 경제발전 관련 계획을 세우고 이에 동참할 파트너 기업을 선정한다.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규율, 그리고 수출의 장려라는 방식을 통해 그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양재진 2012). 특히 한국은 소련에서 활용된 바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활용하는 등 계획경제의 요소와 시장경제의 요소를 혼합한 독특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었다. 스포츠 영역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서구사회가 상정하는 민간영역의 자율적인 스포츠와 전혀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서구처럼 스포츠를 민간에 맡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아예 국가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민간 영역을 소거한 것도 아니었다. 목표할당, 지원, 규율,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방식이었다.

국가의 본격적 엘리트 스포츠 개입은 1966년에 만들어진 태릉선수촌을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165명, 참가규모 5위의 대규모 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했음에도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에 그쳤고, 이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때 임원으로 다녀온 민관식의 아이디어로 1966년 태릉선수촌이 건립되었다(김명권 2013).

1968년부터 국가는 올림픽에서 우수선수가 될 엘리트선수의 육성에 맞춘 체육정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1968년에는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학교체육회를 통합했다. 물론 그 초점은 올림픽에 있었다. 1970년에는 국무총리와 문교·내무·국방·보사·무임소장관, 중정부장,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정·부회장, IOC위원 등이 참석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20억 이상의 모금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과 장학금 지급, 해외파견 등을 결의했다. 이듬해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스포츠 이벤트 개최, 1백명 이상 고용 기업의 운동부 설치 의무,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국영기업체의 메달리스트 고용의무 등을 명문화했다(설정덕·김재우 2011). 나아가 1970년대 초반에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체육중학교와 체육고등학교를 설치했고, 1976년에는 한국체육대학도 설치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974년에 만들어진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제도였다. 올림픽 금, 은, 동메달리스트에게 각각 60, 30, 20만원이라는 거액의 연금이 주어지는 방안이 마련되었던 것이다(이종원 2005, 49-50).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상한 이들은 평생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지위향상을 증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 구상과 시설 준비 역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뤄졌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1958년 제 3회 아시안게임이 도쿄에서 열리면서 신문을 통해 아시안게임 유치 필요성이 피력되고(<경향신문> 1958년 5월 27일, 1), 문교부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염두에 둔 종합경기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동아일보> 1958년 6월 13일, 3면). 1966년도에는 1970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으나(동아일보 1966년 12월 15일, 1), 비용부족으로 68년 봄에 개최권을 반납했고(손정목 2003, 200-1), 같은 해 서울시는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준비할 계획을 세웠다. 1966년 말 발간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천호지구 거여동 일대에 80만평 규모로 경기장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되고 있다(서울특별시 1966, 282). 이에 맞춰 처음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잠실지구는 올림픽 경기장 계획으로 인해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화된다(서울특별시 1966, 324).

1970년 ‘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과 더불어 잠실의 경기장 시설 계획은 구체화되었고(김진희 2011, 131-2), 1974년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을 통해서 확인되었다(서울특별시 1974, 75). 이후 1975년부터 84년 사이에 모든 경기장 시설이 완성된다. 훗날 올림픽 공원이 되는 국립종합경기장부지 역시 1968년이라는 매우 이른 시기에 건설부에 의해 국립경기장 부지로 지정되었고(매일경제 1968년 2월 28일, 5), 1979년 건설부 고시 150호로 확정되고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경향신문 1979년 10월 26일, 8).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1960년대에 이른바 ‘사회체육’에 큰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태릉선수촌의 설치와 1970년대 우수선수 연금제도 도입, 1970년대 중반의 기업의 스포츠 참여 등 엘리트스포츠의 영역에서는 그 변화가 눈에 띄었다(황병주 2002, 김지영·하용용 2014). 반면에, 재건체조(1961년)와 국민체조(1977년)로 이어지는 체조의 보급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력장 제도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전윤수·주동진 2005, 18), 국민 일반이 체력을 기르고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긴 어렵다.

신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실행이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사회정치에 관한 담론의 활용은 두드러진다. 박정희는 모든 전국체전 관련 연설을 발전국가가 원하는 이상적 주체를 호명하는 장소로 활용한 것이다. 다음 연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오늘날의 체육은 다만 국민의 체위와 체력의 향상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실로 유능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함양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로 직면해 있는 민족적 대과업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체육발전을 통해서 조국이 요청하는 이상적 인간상의 양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근대화와 풍요한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우리의 대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실로 우리 국민의 정신과 체력이 얼마나 건전하고 강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박정희 1966년 10월 10일)."

단체와 집합과 긴밀하게 결부된 스포츠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발전국가는 사회의 재조직과 스포츠 담론을 결부시키기도 하였다. 간단히 말해, 발전국가에게 있어 스포츠는 습속개조에 관한 담론을 발신하는 사회정치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래 인용문이 이를 잘 드러내준다.

우리는 구경만 하는 체육이 아니라, 길러 주고 스스로 참여하는 체육이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국민체육의 생활화를 기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스포츠 정신의 함양을 통해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이 서로 협동·단결하는 기풍을 진작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체육 진흥을 통해서 국력을 증강하고 청신한 사회 기강과 기풍을 일으켜 나간다면, 그것은 곧 남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박정희, 1972년 10월 6일).

소년체전의 경우 보다 구체성을 띤다. 발전국가는 1960년대 후반부터 현충사를 비롯하여 역사 영웅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1973년 경주에 만들어진 화랑교육원과 1976년 사임당교육원 역시 그러한 기념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습속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최광승 2014; 김수진 2008). 국가에 충성하는 영웅적 개인들에 대한 강조를 통해 권위주의적 정치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다(홍석률 2002, 193). 이러한 활동과도 스포츠는 결합되어, 1972년부터 시작된 소년체전에서는 ‘화랑정신’이 강조되고(『동아일보』 1972년 6월 16일, 7), 1975년 대회부터는 화랑교육원에서 성화를 체화하기 시작한다(『동아일보』 1975년 4월 28일, 8). 소년체전이라는 공간에서 박정희는 보다 노골적으로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요구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건전한 정신 단련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신을 단련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째는 규율입니다.

규율!

각지에서 모인 여러 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규율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규율이 없는 체육 대회는 체육 대회가 아닙니다. 체육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대회는 될지 모르지만 체육 대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규율은 비단 체육 대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장차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서 협동과 단결심을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각도의 선수들과 대결하여 힘과 기량을 겨루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기량이 우수하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단체 경기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협동하고 단결할 줄 알아야만 이길 수 있으며,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박정희, 1972년 6월 16일).

그러나 스포츠를 통해 습속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해야겠다는 담론과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물질적·제도적 뒷받침은 없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의 개조는 1920-30년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과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이들은 이상적인 남성상, 국민상, 노동자상을 선전하기 위해 축구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Martin 2004; Kunster 2009), ‘국립여가단(Opera Nazionale Dopolavoro)’과 ‘기쁨을 통한 힘(Kraft durch Freude)’이라는 국가적 여가 공급 조직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보통의 노동계급 구성원들도 염가에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말이면 양질의 휴가를 보내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했다.⁸ 여가선용, 즉 ‘합리적 여가(rational recreation)’는 19세기 말부터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에 있어 중요한 도구였고 이것이 습속의 개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음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Bailey 1978). 그랬기에 이탈리아 파시스트와 독일 나치스는 이를 직접 조직하여 제공했던 것이다.

반면에, 박정희 정부는 담론에 있어서만 무솔리니와 히틀러 못지않게 새로운 인간상을 주문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촉구했을 뿐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여가를 공급한 바가 없다. 공장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레크레이션을 정책적으로 보급하긴 했지만, 건전가요 보급 정도에 머무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는 1970년대 발전국가가 도시민들이 여가활동에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1970년대 당시 국가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습속의 변화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 박정희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가 ‘정신의 불안과 사회의 긴장’을 만들어 냈고, ‘퇴폐풍조’와 ‘사회적 혼란’이 등장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황병주 2011, 158). 1970년대 들어 국가는 사회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대중문화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미니스커트와 장발에 대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다(이상록 2006). 1975년 6월에는 ‘건전한 국민생활과 사회기풍 확립’을 위해 가요 공연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하였고(『경향신문』 1975년 6월 5일, 7면), 12월에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명분으로 라디오 방송국들로 하여금 ‘퇴폐한’ 외국 팝음악을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민요, 가곡, 군가 등의 ‘건전가요’였다(『경향신문』 1975년 12월 9일, 8면).

국가는 여가보다는 오히려 밤샘근로와 연장근로 등 끊임없는 노동을 강조했고(김영선 2009, 19), ‘여가선용’을 말하면서도 이를 구체화시킬 수단을 만들진 못했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주어졌던 여가시간 동안에는 노동자들이 하위문화가 그대로 지속되었다(정승국 2005).

⁸ 2차대전 이후 전세계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폭스바겐(Volkswagen)의 자동차 모델 비틀(Beetle)은 처음 개발 당시 노동자들의 여가를 위해 제작되었고, 그 판매를 ‘기쁨을 통한 힘’이 담당했다(도상운 2015). 기타 국립여가단(Opera Nazionale Dopolavoro)과 기쁨을 통한 힘(Kraft durch Freude)에 대하여는 Liebscher(1998)와 Baranowski(2001) 참조.

4. 1980년대 사회정치의 전환과 스포츠 정책의 전환

1) 1980년대 사회정치의 전환 : 사회질서와 통합의 강조

1961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1980년도에 정권을 잡은 군인들도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문제시했다. 이들은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들을 사회 구성원 전반의 습속 탓으로 돌렸다. 자신들의 부당한 정권 장악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역시 피해자들의 습속을 탓했다. 문자 그대로 문제를 ‘사회화’한 것이다.

1979년 10월과 1980년 5월, 사회구성원들의 저항에 당면했던 권력자들은 인식과 대처방법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인다. 자신들에 대한 반대 시위를 도시하층민의 봉기행위로 본 것이다. 이들은 이를 사회적 타자들이 주도하는 무질서한 집단행동으로 파악하고 강력하게 진압하도록 했다.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에게 올라간 경찰당국의 보고는 이 시위를 ‘깡패’, ‘똥마니’, ‘식당뽀이’ 같은 사회의 하층인 또는 타자들의 무질서한 집단행동으로 폄훼했다(김하기 2004, 112). 이 보고 이후 박정희가 킬링필드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진압을 주문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한홍구 2010, 32). 1980년 5월 광주에서 유혈 학살극을 벌인 전두환 역시 그랬다. 2017년에 출간한 자서전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나 구두닦이, 녀마주이, 식당 종업원, 부랑자 차림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사회적 타자들의 무질서한 집단행동으로 이를 폄훼했다(전두환 2017, 401).⁹ 이에 대한 유혈진압은 익히 알려진 바다.

1980년에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1961년의 군인들과 유사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신군부’ 역시 도시의 기층에 존재하는 타자적 존재들을 도시 및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조치”를 발표하고 부랑자와 범죄자를 포함한 온갖 도시 하층민들, 심지어는 무고한 이들과까지 검거하여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때 발표된 글 또한 1961년의 군부가 활용했던 개념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오염원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타자를 ‘일소’하여 사회의 ‘명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이들의 선전이였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 온 폭력·사기·불륜·마약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뽑아 맑고 명량하고 정의로운 새시대·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불량배를 위시한 제반 사회악 일소를 위해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중앙일보』, 1980년 8월 4일, 6).”

1961년도의 군인들이 사회적 타자들을 격리한 이후 ‘재건국민운동’이라는 사회정치 기관을 만들었듯, 1980년의 군인들도 사회적 타자를 격리한 이후 ‘사회정화운동’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1980년 10월 28일,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지역, 직장, 학교에 설치된 조직에 수백만의 회원이 의무 가입될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26).¹⁰ 이 사회정화위원회는 민간단체로 개조된 새마을운동과 병존했다. 전두환은 “새마을운동과 연계시

⁹ 실제로 그런 이들이 다수 참가했는지에 대한 사항과는 별개로, 사회의 타자를 항쟁의 주역으로 만들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전략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정권만 아니라 언론 및 지식인들 다수가 도시 하층민들을 타자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원 2006, 444-445).

¹⁰ 지역단위에서는 리와 통 수준에서 20인의 위원을, 직장 단위에서는 100인 마다 20인의 위원을, 학교에서는 재적학생의 1/3이상 및 교직원 20인, 학부모 20인의 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그렇게 인원을 비대화 시킨 결과 총 550만여명의 창설 초기의 회원이 되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26). 정부 스스로도 이런 비대한 조직에 문제를 느꼈는지 1981년 말부터 조직을 줄이기 시작했다.

켜 사회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하면서, 두 관제캠페인을 활용한 것이다. 예고대로 그 해 12월 1일(『동아일보』 1980년 9월 1일, 3).

무엇보다도 1980년대에는 사회정치의 방향전환이 이뤄졌다. 그것은 도시사회와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발생하는 여러 병리적 현상에 대한 관심이었고, 경제발전보다는 사회질서와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다.

1960~70년대와 1980년대의 사회정치가 강조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1960년대~70년대에는 국가가 사회 구성원 전반의 빈곤을 문제시하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습속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농촌지역의 빈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에 198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도시지역에서의 활동이 이전보다 중요해졌고, 사회정화운동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60~70년대의 사회정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60~70년대는 역시 물량적 성장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정신문화와 사회윤리가 크게 퇴락하는 시기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60년대 이후 형성된 ‘자주·자립의식’이나 ‘하면된다’라는 자신감 역시 물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가치였던 것이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질서의식이나 사회정의 및 국민 화합을 뒷받침할 만한 윤리적·도덕적 가치는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현대사회연구소 1982, 185).”

이에 따라 주요한 사회문제 역시 다르게 상정된다.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을 문제시했다. 농촌지역의 빈곤이 경제적인 발전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마저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1970년대 국가의 판단이었고, 이 문제의 해결이 새마을운동의 중요 목표였다. 새마을운동은 문제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다수 국민인 농촌인이 생산에 집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과 원료생산물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농촌은 농촌대로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던 것이다(내무부 1980, 52).

이와 달리, 사회정화위원회는 사회질서와 사회통합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1960~70년대 근대화의 추진 과정이 경제발전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질서가 혼란해졌고, 이것이 1980년 초에 현저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이들이 생각한 문제적 상황이었다. 다음 인용문이 이를 보여준다.

“물질위주의 근대화로 인하여 전통적 사회윤리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윤리가 확립되지 못하므로써 황금만능의 사조가 판을 치며, 기강이 무너지고 불신이 팽배하며 무질서 하고 혼탁한 사회를 이루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국가발전이 너무도 경제 제일주의적인 발전이념에 지배되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중략) 80년 봄의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혼란된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사회 전반에 물들어 있는 만성적인 부조리를 과감히 제거하고 살기 좋은 새사회 건설을 위하여 국민의 도덕적 윤리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현대사회연구소 1981, 4-6).”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1980년대의 사회정화운동 사이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했다. 농촌의 빈곤이라는 문제에 기초한 새마을운동은 정신계발, 소득증대, 환경개선이라는 주요 목표 중에서도 농가의 소득증대를 가장 중요시 했다(이용기 2012, 74). 반면에 사회정화위원회는 거리 및 교통질서, 행락질서, 상거래 질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질서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새마을운동 그 자체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명목적으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근대화를 목표로 시작’하여 도시, 공장, 직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표현된다(내무부 1981, 115).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것과 달리 도시부의 새마을운동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이용기 2012, 75, 82). 그래서 1980년대 들어 국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주로 한 사업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1980년대 새마을운동의 주 활동 공간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시키고자 하였고, 강조점 또한 소득 증대보다는 ‘정신개조’와 ‘의식개혁’을 위주로 했다(윤충로 2016, 201-203).

이 뿐 아니다. ‘의식’과 ‘정신’이라는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 역시 달라졌다. 1960-70년대, ‘의식’이란 개념은 경제발전을 위주로 한 근대화에의 지향성을 함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식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잘사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갖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내무부 1980, 64-69). 생산성, 근면성, 이윤개념 등이 습속화되는 상태가 바로 의식개혁의 결과로 상정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국가가 상정한 ‘의식’은 대중들의 습속의 질서-무질서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1980년대 사회정화운동이 생각한 의식개혁운동은 “거리질서를 비롯한 각종 사회질서의 확립, 청탁풍조의 배격, 허례허식의 추방”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전두환 1981년 11월 30일). 1980년대의 국가에게 의식의 개혁은 습속의 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질서의 확립이었다.

이들은 사회통합 또한 ‘의식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 먼저 이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적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것 1979년부터의 사회정치 위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제성장 과정을 따라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급히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져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었다. (중략) 이것은 한껏 부풀었던 기대가 깨어지면서 사회적 불만이 높아져 혁명적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뜻이다. 70년대 말의 비등하던 사회적 불만 고조가 다름 아닌 ‘기대와 좌절의 혁명’적 상황이 빚어낸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현대사회연구소 1982, 183).”

여기서 발전국가의 한국의 사회정치가 갖는 특징 중 하나가 드러난다. 보통의 복지국가란 이러한 빈부 격차의 증대가 문제시 될 경우 제도적 재분배 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1980년대 국가는 문제가 된 소비행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과외금지였다. 신군부는 아직 국보위의 형태를 취하고 있던 1980년 7월 30일 ‘사회정화’ 차원에서 과외 교습행위를 전면 금지시킨다. 이 때 국보위는 “과열 과외로 인한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면서 범국민적 단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경향신문』 1980년 7월 30일, 3). 이러한 과외금지 조치 위반을 단속하는 일이 사회정화위원회의 활동 중 하나였다. 호화로운 결혼식과 호화로운 분묘를 조성하는 행위 역시 사회정화위원회가 단속권을 행사하는 영역 중 하나였다.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계층간 위화감 조성행위’라는 것이었다.

2) 사회정치 실천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와 여가의 공급

앞에서 보았듯, 1980년대 들어 발전국가는 자신들이 조우하고 있는 사회현상이 도시사회와 산

업사회임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처럼 도시적 습속을 비판하고 여가에 대하여서는 통제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대중의 여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급하려 했다. 프로야구 설립을 주도했던 이용일의 증언에 의하면 프로야구의 설립이 처음 논의된 자리는 국민 정서 및 국민 여가선용에 관한 청와대 수석회의 자리였다(강지웅 2006, 85). 최근 연구는 프로야구를 ‘국가의 여가 기획’으로 정의했는데(심은정 2016), 1970년대부터 대중의 여가에 개입해온 발전국가임을 생각한다면, 이는 타당성을 지닌다 판단된다.

이러한 프로스포츠의 등장을 가능케한 조건은 1970년대 이후 재벌기업의 성장이었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는 프로스포츠를 급조했다. 그래서 관중 및 방송중계를 통한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서구의 프로스포츠에 비해 턱없이 적은 관중수로 인해 프로스포츠는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리그가 만들어져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프로구단들이 적자를 감당할만한 재벌기업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1983년에는 프로축구와 프로씨름이 생겨났고, 83년 겨울부터 농구대잔채와 배구의 대체전이라는 이름으로 겨울철 스포츠의 경기수가 대폭 늘어났다.¹¹

이 시기에는 직장체육과 사회체육도 동시에 강조되었다. 직장체육은 노사협조 및 생산성향상의 수단으로(『새마을스포츠』 1986년 1월호, 60-62), 사회체육은 ‘국민화합’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새마을스포츠』 1982년 4월호, 24-29). 그래서 정부는 직장 단위에서의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강조했다. 직장체육을 위해 국가는 5백인 이상 사업장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했고(『동아일보』, 1983년 8월 11일, 9), 1백인 이상 사업장에는 분기별 사내체육대회 실시를 의무화 했다(『경향신문』, 1983년 11월 14일, 7).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조성된 한강공원 역시 도시인의 여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한강을 만들면서 국가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의 증가로 인해 휴식과 위락활동을 위한 공원이 필요해졌음을 전제로 하여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공원을 만들었다(서울특별시 1990, 568).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고수부지의 상당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어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1970년대부터 발전국가는 ‘여가선용’와 ‘정서함양’ 같은 개념 하에서 대중의 여가와 취미에 개입하여 개조하기를 원했고(박해남 2016, 362),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스포츠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발전국가의 여가 통제 정책에 한강개발은 궤를 같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 위에서 만들어진 한강개발은 ①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도시환경개선, ② 도시화 팽창으로 각박해진 인간성 형성에 유희감을 주고 하천애호의 정신 함양, 새로운 공간의 창출, ③ 공공성, 공간성, 광역성을 가진 건전한 시민 레크레이션공간 확보 등을 중요한 목표로 하여 시행된 사업이었다(서울특별시 1989, 8-9).

여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틀에서 볼 경우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나 사회정화위원회 등의 사회정치 기구들의 건전가요 등도 시야에 들어온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82년부터 85년까지 매년 건전가요 공모와 시상식을 가졌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1983)』을 포함, 김수철의 『젊은 그대(1984)』,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1985)』, 인순이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¹¹ 1970년대 최고 인기종목 중 하나였던 배구의 경우 1960년대만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군과 공기업(남자부)이나 은행(여자부)이 팀을 소유했다. 1970년대 초입부터는 호남정유, 태광산업, 선경합섬, 대농(미도파) 등, 한일합섬, 대우실업 등의 기업들이 여자배구팀을 창단했다. 그리고 82년 국제상사, 후지필름, 효성 등이 기존의 공기업 및 은행 팀들을 인수하면서 여자배구는 대부분 사기업 소유가 되었다. 남자배구는 이보다 느렸지만, 1976년 금성통신을 시작으로, 82년 고려증권과 현대자동차서비스 팀이 만들어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배구’의 틀이 만들어졌다(대한배구협회 1994, 135; 223; 234; 259; 322).

농구 역시 이와 비슷하다. 1960년대에는 한국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국영은행들과 군(남자부), 상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등 민영은행(여자)이 팀을 이루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 대기업체들이 농구팀을 만들기 시작해 코오롱, 선경직물, 한국화장품, 태평양화학 등의 여자농구단을 만들었다. 1977년과 78년 삼성과 현대가 남녀 농구팀을 만들면서 대기업 중심의 실업 농구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대한농구협회 2008, 166; 187-190).

(1985)』, 남궁옥분의 『서로 믿는 우리 마음(1982)』, 방미 『나의 사랑 대한민국(1985)』 등이 1982년에서 1985년 사이 선정된 건전가요들이었다(경향신문, 1984년 8월 8일, 12; 매일경제, 1985년 11월 26일, 12). 이들 중 몇몇 곡은 큰 인기를 얻었고, 건전가요를 타이틀곡으로 삼은 가수도 하였다(이영미 1995, 260). 하지만, 사회정화위원회가 이 노래들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 공장, 행정기관, 방송국 등에 건전가요 앨범을 여러 차례 배포했고,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를 여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336; 360; 367; 392). 범민족 올림픽중앙추진위원회 역시 1987년 말 건전가요 14곡을 모은 테잎 5천개를 제작하여 산하기관에 배포하기도 하였다(범민족올림픽중앙추진위원회 1988, 116). 대중가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발전국가는 여가에 개입하였다. 한강개발을 상찬한 가사를 담은 『아! 대한민국』 나 올림픽 주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아침의 나라에서』 같은 노래들은 그 자체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¹².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여가에 개입하기 위한 몇 개의 이벤트도 개최했다. 1987년 5월 30일 ‘여가선용 큰잔치’라는 행사를 열고 전통놀이와 춤을 레크리에이션에 활용하고 서울올림픽 응원가를 보급하는 행사를 열었고(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89), 같은 해 7-8월 사이에는 총 32개 주요 도시를 돌면서 ‘올림픽 새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행사를 가졌다(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96). 참가자는 각기 수천명이어서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올림픽을 명분으로 여가에 대한 발전국가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올림픽을 준비하던 이 시기 국가에게 스포츠가 ‘여가선용’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스포츠 이벤트는 올림픽의 예행연습처럼 여겨졌고, 이에 따라 국가는 경기장에 대한 질서가 무던히도 강조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82년부터 거리질서, 상거래질서, 공공질서에 더하여 ‘경기장 질서’ 항목을 주요 사업으로 추가하였다. 이 항목이 추가된 것은 86·88 양 행사 외에도 “주요 스포츠 경기들이 TV화면을 통해 중계방송 됨에 따라 부정선수 시비, 판정불복 시비, 선수·임원 폭력, 음주관중 난동 등 무질서한 작태가 공공연히 실황 중계되어 국민의 질서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중의 습속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존재이자 올림픽을 저해하는 존재로 경기장의 무질서 및 이를 일으키는 이를 상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 위에서 사회정화위원회는 경기장 난동의 구속수사 원칙 등을 포함, 경기장 질서확립 종합대책을 1982년 8월에 수립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09).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스포츠이벤트인 전국체전이 중요한 ‘시범장’이었다. 1982년부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질서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1982년 전국체전 준비위원회에는 경기장질서확립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면서 경기력 향상보다 질서를 우선이라고 할 정도로 질서문제에 신경을 썼다(『동아일보』 1982년 9월 27일, 8). 전두환도 개회식에서 전국체전이 “질서의식을 생활화하는 뜻깊은 다짐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스포츠 이벤트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하였다(『매일경제』 1982년 10월 14일, 1).

이 때부터 전국체전은 ‘질서’라는 개념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장이 되었다. 1983년도 소년체전은 구호를 “선진질서, 선진체전, 선진조국”으로 바꾸었고(『경향신문』 1983년 5월 21일, 1),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구호는 “화합된 새 기상, 다져질 새 질서, 펼치는 새 조국”이었다(대한체육회 1983). 대회 중 선수간 난투극이 벌어지자 한쪽에서는 “질서체전에 먹칠”이라는 비난이 일고(『매일경제』 1983년 10월 11일, 1),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장 질서에 대한 과민반응”이라며 반발이 일었다(『동아일보』 1983년 10월 12일, 9). 그 만큼 전국체전을 둘러싸고 질서담론이 계속해서 연표되었던 것이다.

¹² <아침의 나라에서>는 <아! 대한민국>의 작사가인 박건호가 만든 노래로, 문화방송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모한 “서울 올림픽 노래” 당선작이었다(<경향신문> 1985년 11월 22일, 12).

전국체전은 각종 무질서를 감시하는 시선이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82년 마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이 개최될 때마다 관계부처를 모아 질서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특별관리를 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10-111). 현장계도라는 이름으로 감시활동을 편 것이다. 사회정화위원만 아니라 도시새마을운동 측에서도 현장계도 활동에 참가했다(『새마을스포츠』 1982년 11월호, 24). 전국체전을 비롯해 크고 작은 스포츠이벤트를 통해 사회정화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차례대로 입장, 쓰레기 치우기, 건전한 응원하기, 경기장 난입금지, 공병투척 금지, 주류 유리병 지참 금지 등의 사항을 두고 1982년부터 7년간 단속활동을 벌였는데, 이에 참가한 인원만 해도 158,058명이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10).

눈여겨볼만한 점은 매년 전국체전이 끝날 때마다 대부분 질서체전이었다는 상찬이 따랐다는 것이다. 1982년과 1984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도시새마을운동 측에서는 “경기장, 거리, 상가,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어느 곳에서도 시민들의 행동엔 흐트러짐이 없었다”거나(『새마을스포츠』 1982년 11월호, 24), “경기장과 거리 어디서도 무질서는 눈을 크게 뜨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경기장과 개최도시의 질서를 상찬했다(『새마을스포츠』 1984년 11월, 29). 막상 스포츠이벤트를 치렀을 때 질서문제가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질서문제에 대해서, 즉 대중의 습속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거두지 않았던 것이 발전국가의 지속된 생각이었던 것이다.

프로야구를 포함한 프로스포츠의 경기장 역시 질서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랬기에 계속해서 경기장과 그 주변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존재했다. 1983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는 프로야구의 질서 감시를 위해 잠실경기장에 질서기획단을 설치했고(사회정화위원회 1988, 327), 6월 2일 경기도중 심판을 폭행한 삼미슈퍼스타즈의 김진영 감독이 하루 만에 구속되는 강력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중앙일보』 1983년 6월 3일, 7). 1984년 4월에는 프로야구 6개 구단 이사, 감독, 주장 등을 불러 경기장 질서 확립대책 회의를 열었고, 8월에는 프로야구, 축구 등 주요 경기마다 질서기획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1987년 2월에도 각 구단 관계자들과 사회정화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기장 질서요원 운영, 경기장 주변 주류판매 제한 등을 논의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352; 358; 431).

한편, 스포츠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982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노동부는 올림픽 대비사업 중 하나로 직장체육 활성화를 들었다. 사업체마다의 전 노동자 체육활동을 통해 직장을 ‘총화’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계획이었다(“1982년도 주요업무계획”, 1982년 8월). 1983년도부터 3년간 노동부는 올림픽 준비사업의 하나로 전국근로자체육대회를 개최한다(“1983년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1984년도 주요업무계획”, 1984년 2월; “1985년도 주요업무계획”, 1985년 2월). 이때 이들이 내세운 목표는 “스포츠정신으로 노사협조분위기 조성”, “근로의욕과 생산성 향상” 등의 목표를 내세웠다(『매일경제』, 1983년 9월 22일, 11).

전국체전은 각종 무질서를 감시하는 시선이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82년 마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이 개최될 때마다 관계부처를 모아 질서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특별관리를 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10-111). 현장계도라는 이름으로 감시활동을 편 것이다. 사회정화위원만 아니라 도시새마을운동 측에서도 현장 계도 활동에 참가했다(『새마을스포츠』 1982년 11월호, 24). 전국체전을 비롯해 크고 작은 스포츠이벤트를 통해 사회정화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차례대로 입장, 쓰레기 치우기, 건전한 응원하기, 경기장 난입금지, 공병투척 금지, 주류 유리병 지참 금지 등의 사항을 두고 1982년부터 7년간 단속활동을 벌였는데, 이에 참가한 인원만 해도 158,058명이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10).

눈여겨볼만한 점은 매년 전국체전이 끝날 때마다 대부분 질서체전이었다는 상찬이 따랐다는 것이다. 1982년과 1984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도시새마을운동 측에서는 “경기장, 거리, 상가,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어느 곳에서도 시민들의 행동엔 흐트러짐이 없었다”거나(『새마을스포츠』 1982년 11월호, 24), “경기장과 거리 어디서도 무질서는 눈을 크게 뜨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경기장과 개최도시의 질서를 상찬했다(『새마을스포츠』 1984년 11월, 29). 막상 스포츠이벤트를 치렀을 때 질서문제가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질서문제에 대해서, 즉 대중의 습속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거두지 않았던 것이 발전국가의 지속된 생각이었던 것이다.

프로야구를 포함한 프로스포츠의 경기장 역시 질서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랬기에 계속해서 경기장과 그 주변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존재했다. 1983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는 프로야구의 질서 감시를 위해 잠실경기장에 질서기획단을 설치했고(사회정화위원회 1988, 327), 6월 2일 경기도중 심판을 폭행한 삼미슈퍼스타즈의 김진영 감독이 하루 만에 구속되는 강력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중앙일보』 1983년 6월 3일, 7). 1984년 4월에는 프로야구 6개 구단 이사, 감독, 주장 등을 불러 경기장 질서 확립대책 회의를 열었고, 8월에는 프로야구, 축구 등 주요 경기마다 질서기획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1987년 2월에도 각 구단 관계자들과 사회정화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기장 질서요원 운영, 경기장 주변 주류판매 제한 등을 논의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352; 358; 431).

한편, 스포츠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982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노동부는 올림픽 대비사업 중 하나로 직장체육 활성화를 들었다. 사업체마다의 전 노동자 체육활동을 통해 직장을 ‘총화’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계획이었다(“1982년도 주요업무계획”, 1982년 8월). 1983년부터 3년간 노동부는 올림픽 준비사업의 하나로 전국근로자체육대회를 개최한다(“1983년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1984년도 주요업무계획”, 1984년 2월; “1985년도 주요업무계획”, 1985년 2월). 이때 이들이 내세운 목표는 “스포츠정신으로 노사협조분위기 조성,” “근로의욕과 생산성 향상” 등의 목표를 내세웠다(『매일경제』, 1983년 9월 22일, 11).

5. 결론

(추후 보충)

참고문헌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월간 『말』, 『새마을스포츠』, 『정화』, 『올림픽서울』, 『올림픽광장』, 『올림픽 뉴스』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 10년사』
_____, 1981, 『새마을운동』
“1982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노동부, BA0852133
대한농구협회, 2008, 『한국농구100년』
대한배구협회, 1994, 『한국배구70년사』
대한체육회, 1983, 『동경올림픽선수강화대책본부 보고서』
민주한국 혁명청사편찬위원회, 1962, 『민주한국혁명청사』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국민참여운동 백서』
사회정화위원회, 1988, 『사회정화운동사 1980~1988』
서울특별시, 1966, 『서울도시기본계획』.
_____, 1974,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
_____, 1988, 『한강종합개발사업 건설지』
_____, 1990, 『서울올림픽 백서』.
_____,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2010년 개정판)』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한국군사혁명사 1(상)』
현대사회연구소, 1981. 『사회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
_____, 1982,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상』

- 강준만, 2003,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제 2권』, 인물과 사상사112;
- 강지웅, 2006, “5공의 3S 정책, 스포츠로 지배하라”,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한국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해냄.
-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2002, 『포스트콜로니얼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 김명권, 2013,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요람: 태릉 선수촌(1966-8000)”, 『한국체육사학회지』, 18(2).
- 김수진, 2008,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 신사임당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80.
- 김수현, 2010년 8월 27일, “'편동편동 노는' 부랑인? 그 오래된 부끄러운 역사”, 『프레스리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644> (검색일 2017. 11. 22)
- 김영선, 2010, “발전국가 시기 작업장의 시간정치: 노동시간 및 자유시간에 대한 분석”, 『여가학연구』, 8(1).
- 김 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정신문화연구』, 29(2).
- 김윤태, 2012,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고도성장파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 김종태, 2015, “발전시대 이전 발전담론의 위상 - 1950년대 대중매체의 발전, 문명 인식”, 『한국사회학』, 49(4).
- 김지영·하용용, 2014, “프로야구의 프로메타우스, 롯데 자이언트 실업야구 팀”, 『한국체육사학회지』, 19(2).
- 김진희, 2011,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하기, 2004, 『부마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홍중, 2016, 『사회학적 과상력』, 문학동네.
- 나인호, 2000, “산업화, 사회문제, 그리고 독일제국시대 시민적 사회개혁의 정치화”, 『역사와실학』, 15·16
- 다나카 타쿠지, 박해남 역, 2014, 『빈곤과 공화국 - 사회적연대의 탄생』, 문학동네.
- 도상윤, 2015, “1930년대 폭스바겐 공장의 건설과 민족공동체”, 『경주사학』, 39-40.
- 박정희, 1962(2005),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사회재건의 이념”, 『하면 된다! 펼쳐 일어나자』, 동서문화사.
- 박정희, 1966년 10월 10일,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치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1)
- _____, 1972년 6월 16일, 제1회 전국 소년체전 치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1)
- _____, 1972년 10월 6일, “제53회 전국체육대회 치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1)
- 박해남, 2016, “1988 서울올림픽과 시선의 사회정치”, 『사회와역사』, 110.
- 백승욱·이지원, 2015, “1960년대 발전담론과 사회개발 정책의 형성”, 『사회와역사』, 107.
- 설정덕·김재우, 2011, “박정희 정권의 국민체육심의위원회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6(3).
- 심은정, 2014, “제5공화국 시기 프로야구 정책과 국민여가”, 『역사연구』, 26.
- 양재진, 2012, “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진흥 전략: 수출 진흥과 규율의 정치경제학”, 『동서연구』, 24(3).
-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
- 윤충로, 2016, “새마을 운동 이후의 새마을운동 - 198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9.
- 이상록, 2006, “박정희 체제의 ‘사회정화’ 담론과 청년문화”, 장문석·이상록 엮음,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 대중독재와 박정희 체제』, 그린비.
- 이시다 다케시, 한영혜 역, 2003, 『일본의 사회과학』, 소화.
- 이용기, 2012, “유신이념의 실천도장, 1970년대 새마을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48.
- 이학래·김종희, 1999, “박정희 정권의 정치이념과 스포츠 내셔널리즘”, 『한국체육학회지』, 38(1).

- 전두환, 1981년 11월 30일, “사회정화 국민운동 전국대회 유시”,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2)
- 전두환, 2017, 『전두환회고록 1 - 혼돈의 시대』, 자작나무숲.
- 전윤수·주동진, 2005,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 체육정책 담론”, 『한국체육과학회지』, 14(1).
- 전재호, 2010, “5.16 군사정부의 사회개혁정책: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과 재건국민운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2).
- 정승국, 2005, “여가없는 노동? 1970년대 자동차 기업의 노동자 생활”, 『경제와 사회』, 68.
- 정영환·이호근·신현규, 2009, “박정희 정권의 스포츠정책 다시보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5.
- 정준영, 2012, 『문화산업과 문화기획』, 방송대출판부.
- 정준영·최민규, 2016, “프로야구에 열광하다”,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 1980년대』, 창비.
- 정해구, 2011,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 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역사비평사, p. 228.
- 조희연, 2003, “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의 동학』, 함께읽는책.
- 최광승, 2014,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한국학연구』, 33.
- 최연식, 2007,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2).
- 최인이, 2011, “근대적 시간관념과 이윤개념의 내면화 - 새마을부녀지도자의 노동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90.
- 한상진, 1992, « 서울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의 성격 », 『한국의 지역문제와 노동계급』, 문학과지성사.
- 한홍구, 2010,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한겨레.
- 허은, 2010, “박정희 정권 하 사회개발 전략과 쟁점”, 『한국사학보』, 38.
- 황병주, 2002, “박정희 시대 추구와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동원과 국민형성”, 『당대비평』, 2002년 6월호.
- _____, 2011, “유신체제의 대중인식과 동원 담론”, 『상허학보』, 32.
- 홍석률, 2002,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역사』, 62.

- Abel, Jonathan, 2012, *Redacted: The archives of censorship in transwar Japan*. Univ of California Press.
- Amsden, Alice H., 1992,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iley, Peter, 1978, *Leisure and Class in Victorian England: Rational recreation and the contest for control, 1830-1885*. Routledge.
- Baranowski, Shelley, 2001, "Strength through joy: Tourism and national integration in the Third Reich." *Being Elsewhere - Tourism, Consumer Culture, and Identity in Modern Europe and North Americ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lack, David, and Byron Peacock, 2011, "Catching up: understanding the pursuit of major games by rising developmental stat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8(16).
- Davis, Lisa Kim, 2011, “Cultural Policy and the 1988 Seoul Olympics: ‘3S’ as Urban body politics”, in William M. Tsutsui and Michael Baskett eds., *The East Asian Olympiads 1934-2008: Building Bodies and Nations in Japan, Korea, and China*, brill.
- Elwitt, Sanford, 1986, *The third republic defended: Bourgeois reform in France, 1880-1914*,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Flanagan, Maureen A., 2007, *America Reformed: Progressives and Progressivisms*,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leaf, William Howard, 1983, *The British political tradition. 2*. Methuen, 1983.
- Hayes, Calton, 1913, *British Social Politics - Materials illustrating contemporary state action for the solution of social problems*, Ginn and Company.
- Horne, Janet Regina, 2002, *A Social laboratory for modern France: The Musée Social and the*

- rise of the welfare state*. Duke University Press.
- Kaufmann, Franz-Xaver, 2003, *Varitenten des Wohlfahrtsstaats – Der deutsche Sozialstaa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Suhrkamp.
- Kunster, Marie, 2009, *Sport und Politik – Die Geschichte des FC Schalke 04 im „Dritten Reich“*, GRIN Verlag.
- Liebscher, Daniela, 1998, “Freizeit im Faschismus: Die "Opera Nazionale Dopolavoro" und ihre internationale Bedeutung”. *Moving the Social*, 21.
- Marshall, Thomas,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Simon, 2004, *Football and Fascism: The national game under Mussolini*. Berg.
- Rae, John, 1890, “State Socialism and Social Reform”, *Contemporary Review*, lviii.
- Rodgers, Daniel T., 1998, *Atlantic crossings: Social Politics in a Progressive A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Melvin J., 1950, *Catholic Social Thought – Its Approach to Contemporary Problems*, The Ronald Press Company.
- Woo-Cumings, Meredith, 1999, “Introduction: Chalmers Jonson and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Development”, in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 友常 勉, 1995, 「一九四〇年東京万国博・オリンピックと被差別部落へのまなざし」, <http://www.asahi-net.or.jp/~ls9r-situ/tomoar1.html> (검색일 2016. 12. 10)
- 中野耕太郎, 2015, 『20世紀アメリカ国民秩序の形成』, 名古屋大学出版会。